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50 -

“특허 경쟁의 핵심은 속도!”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 발표

- ‘기술경쟁시대’ 발맞춘 신속한 행정으로 스타트업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우대심사 대상 확대, 심사인력 확충, 심사 인재 육성으로 기간 단축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5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 추세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으로 심사의 질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 후보는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며,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높ی겠다”고 밝혔다.

세부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를 통해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 심사인력을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최대 1천 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

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심사 기간 단축’ 소확행 공약 발표는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됐다.

스타트업 경영인인 한 참가자가 “특허심사를 신속히 해달라” 고 이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고, 이에 이 후보가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특허 분야도) 똑같다” 며 소신을 밝히며 △기업의 특허출원 등록 심사 기간을 줄이고 △관련 심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의견을 발빠르게 적용해, 간담회 이후 약 일주일만에 소확행 공약으로 개발, 발표한 것이다.

선대위는 각계의 어려움과 현장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을 표방한 소확행 공약은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뒤 현재까지 총 50개가 발표됐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탈모 지원’ 공약의 경우 발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 참고자료

1. 특허심사 현황

-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미흡
 -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 해외시장 선점에 필요한 해외 특허출원이 무역 규모에 비해 부족
- 특허심사 기간은 1년 6개월 ~ 2년까지 소요
-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는 23만 건임에도, 심사인력은 970여 명에 불과
- 특허심사 단축이 어려운 이유는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허심사 건수가 양적으로 많지만 심사 인원은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우수한 특허심사 인재의 양성과 특허심사관 유입을 통해서 특허심사의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품질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특허우선심사 제도

- 긴급처리를 요하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하는 제도 시행 중
 - 특허우선심사 제도란 심사청구 된 특허출원 중에서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출원인에 대하여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임
 - * 본래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차례로 행하는 것이 원칙
 - * 특허우선심사제도 대상은 녹색기술, 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 관련, 벤처기업,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출원인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 출원
 - 특허우선심사는 3~6개월 안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음

3. 스타트업 특허 경쟁력 현황

-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Data, Network, AI) 등 미래 선도기술 분야는 스타트업의 약진이 중요*하나, 국내 스타트업 부진**

* 美 팰런티어(Palantir) 사례 :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기, 범죄, 테러 예방 솔루션 제공 업체('20.6월 기준 기업가치 122억불)

** CB Insights 선정 AI 분야 세계 100대 유망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 전무('20. 3)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의 권리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스타트업은 자금 및 IP 전문성 부족으로 IP 경쟁력까지 미흡
- 스타트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IP 경쟁력 강화 활동에 소홀
- * 스타트업 중 특허권·디자인권 없이 창업하는 비율이 41.4% 86.4%(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백서, '16)

4. 특허 심사기간 단축 대책

(1) 우선심사대상 확대

- 현재 우선심사대상은 방위산업, 녹색기술, 4차산업혁명 관련기술, 국가 및 지자체 직무 관련 기술, 스타트업 기업, 혁신기술 등을 우선심사대상의 요건이나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11일에 통과된 「국가전략산업특별법상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특허 출원에 우선심사대상 포함 필요
- 특허우선심사는 「특허법」 제61조, 시행령 제9, 10조에 근거
- 우선심사대상 요건이 확대되면 1년6개월의 심사기간이 3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음

(2) 심사인력 보강

- 현재 970명의 특허청 심사인력이 연간 23만원 특허출원을 심사하고 있음
- 특허 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 심사, 미국의 3배 업무과다
- 특허심사의 품질도 열악한데 1건당 10.8시간으로 선진국 중 최저임
- *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공공연의 미활용특허는 77.9%, 우수특허비율은 2~3%에 불과
- 따라서 특허심사인력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보강하여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기업의 특허심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소, 기업 등의 석박사급 퇴직 전문 인력 1000명을 특허청 전문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함
- * 전문임기제 심사관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 * 임기는 5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안부 협의 등에 따라 연장가능

- 기재부는 특허청의 작년 수입 중 10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여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곳에 사용 중(특허청 수수료 수입 6695억 원 / 2022년 예산안)
 - * 특허청은 출원료, 등록료 등 고객납부 수수료를 통해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여유 재원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
 - 기재부로 환수되는 1000억 원을 반도체 분야 등에서 퇴직하는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가는 인력을 막아 몇십조의 국가적 이득을 얻고 국가산업경쟁력을 지킬 수 있음
- 심사관이 증원되면 강한 특허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기술금융,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에 중요 역할 할 것임
- (기대효과) 현재 특허청 심사인력 970여 명에서 1,000명을 증원하면 심사기간 2년 → 1년으로 단축
 - 인력보강에 의하여 우선심사분야 대상 확대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혁신기술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 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특허심사 인재양성과 기업의 특허인재 채용

- 중소기업에서 4차산업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듯이 4차산업혁명, 혁신기술, 스타트업 관련 주력기술에 대한 심사인재 양성도 이루어져야 함
- 신시장 대응을 위한 IP 전문인력 양성 및 변리사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P 빅데이터 · 금융 · 경영 · 4차산업기술 등 분야별 특화된 지역 거점 IP 중점대학 신설, 변리사 전문교육, 선발제도 개편
 -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지역기업의 IP 수요를 반영한 IP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 · 지역대학 ·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한 특허실무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